

# “교권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5점 만점에 1.8점”

### 경기 지역 초중등 교사·학부모 각 4000명씩 설문 교사·학부모 모두 “보호자 조치 가장 미흡” 응답 교육감협 “교원지위법에 학부모교육 의무화해야”

수업 방해, 폭언·폭행 등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행정학회 학술지인 교육행정학연구 6월호에는 김소현 교육부 교육연구사, 김범주 경기도교

육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작성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보호 정책에 대한 요구 분석’ 보고서가 실렸다. 연구진은 지난해 8~9월 경기 지역 교사와 학부모 각 4000명씩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11가지 교권보호 정책이 각

각 얼마나 중요하다고 인식하는지, 반면 현장 실행도는 어떤지를 5점 만점으로 응답했다. 그 결과,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교권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하지만 현장 실행도는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의 중요도는 5점 만점에 초등교사 4.70점, 중등교사 4.45점이었으나, 실행도는 초등교사 1.81점, 중등교사 2.38점으로 나타났다. 중등교사보다 초등교사 집안에서 중요도와 실행도 간 괴리가 더 컸다.

학부모 응답자들도 11가지 교권보호 정책 중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

치’의 현장 실행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학부모들이 평가한 보호자 조치 실행도는 2.73점으로, 교사들의 인식보다는 비교적 잘 실행되고 있다고 봤다. 중요도 순위에서도 ‘보호자 조치’(4.02점)는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4.14점), ‘학생, 보호자, 교사 등 학교 내 협력적 상생관계’(4.10점)에 밀렸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2018년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일부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 보호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라며 “보완책

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서이초 교사의 극단선택 이후 악성민원, 폭언·폭행 등 학생과 학부모의 교권 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당국도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긴급 임시총회를 열고 ‘교원지위법에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학부모에게 학부모교육 병과를 의무화할 것’을 국회에 요구하기도 했다. 학부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교육부는 이달 말 교권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유나기자



대형 모래매대 쌓아 태풍 대비

6호 태풍 ‘카눈’이 북상 중인 9일 오후 부산 서구의 한 초고층 아파트 상가와 호텔 관계자 등이 중장비를 동원해 대형 모래매대를 쌓아 차수벽을 만들고 있다.

## 택배노조 “쿠팡, 배달구역 회수제 폐지” 오체투지 행진

### “클렌징 폐지·적절 수준의 평가제 시행하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9일 쿠팡 로지스틱스서비스(CLS)에 대리점의 배달 구역을 회수할 수 있는 ‘클렌징’ 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하는 오체투지 행진에 나섰다.

택배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CLS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LS는 단지 수행률이 하락했다 이유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구역을 마음대로 회수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수입을 0원으로 만들어 사실상 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CLS는 대리점에 택배 노동자가 달성하기 어려운 배송업무 수행률을 제시하고 이에 미달하면 ‘클렌징’으로 명명한 배달

구역 회수를 통보해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노조는 “CLS가 클렌징 기준으로 삼는 ‘수행률’은 일종의 ‘당일배송’으로 타 택배사에서 이를 관리하지만, 구역 회수나 해고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택배 노동자들의 극심한 고용불안을 낳는 클렌징을 폐지하고,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평가제도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체투지에 나선 송정현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일산지회장은 “쿠팡은 ‘새로운 물류 혁신’이라 얘기하지만 결국 택배 노동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한 물류 혁신임이 확인되고 있다”며 “언제까지 해고를, 목숨을 담보로



한 배송을 해야 하나”라고 호소했다.

오체투지에 동참하는 강민욱 전국택배노동조합 쿠팡택배 강남지회장은 “석 달간 강남지회에서 5명의 택배 노동자들이 해고당했다”며 “그분들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떠올리며 절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슬비기자

## 이태원 참사 유족들 국가배상 청구...“경찰, 합법집회 폭력 대응”

### “5월 당사 집회 합법인데도 폭력 대응”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지난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 경찰이 부당한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국가배상을 청구했다.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은 경찰의 위법부당한 물리력 행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원고는 고(故) 송채림씨 부친 송진영씨 등 유가족 3명이다.

지난 5월8일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은 참사

200일을 앞두고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 당시 집회는 합법적으로 신고된 집회였는데 경찰이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제적인 물리력을 동원해 유가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집회 물품을 가로막았다는 게 유가족 측 주장이다.

협의회에 따르면 당시 집회에 참가했던 유가족 일부는 흉부 타박상 등 전치 3주, 뇌진탕과 두부타박상 등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경찰

은 유가족의 평화 집회를 폭력적으로 막고 2차 피해를 하며 유가족 집회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두고 보고 있다”며 “국민을 지킬 경찰이 우리를 외면하고 폭력을 행사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유가족도 “집시법은 금지 또는 제한통고, 제한 내지 해산 사유의 근거를 모두 법률에 두고 있다”며 “집회 당시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진행하기 위해 당사 앞에 모였는데 경찰은 트럭을 막아서도 참가자들을 막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뉴시스

# 신문인쇄 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주)남도프린테크는 신문사 법인설립, 신문발행업 등록, 편집, 인쇄까지 토털 서비스 가능한 업체입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광주·전남 최초로 신문윤전판 출력시스템 도입
- 월등한 색상 구현력에 더러움 현상은 최소화!
- 최상의 인쇄 품질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803번안길 93-10(용동) 평동산단 3번도로 끝

Tel : 062)943-0135~6 Fax : 062)943-0134 담당자 : 010-2656-4747(장상문 전무)

